

## 2014년도 제51회 변리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수험번호	성명
1교시	민사소송법	120분		

### 【 문제-1 】 (30점)

일본 동경에 주소를 두고 음식점을 운영하던 甲은 동경에 주소를 두고 있는 乙에게 2004. 7. 4. 500만 엔을 변제기 2004. 9.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차용증서는 일본의 문구점에서 그 내용의 대부분이 인쇄된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서, ‘만일 본건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때에는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한다’는 취지가 부동산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그런데 甲은 2013. 3.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丙에게 기존의 채무를 청산하려고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을 양도받은 丙은 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 (1) 乙이 ‘이 사건 소는 합의관할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제 재판관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다. 위 乙의 항변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 (2) 서울중앙지방법원이 乙의 관할위반 항변을 판단하기 위해 위 사건의 차용증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검토하는 도중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이 있더라도 제소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발견하였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 쟁점으로 삼아 소의 적법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직권으로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10점)

【 문제-2 】 (20점)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에 대한 소장부분 및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그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2010. 11. 10. 甲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정본 역시 2010. 12. 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乙에게 송달되었다. 乙은 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4. 7. 7.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후 乙은 2014. 7. 11. 제1심 법원에서 재판기록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함으로써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 (1) 乙이 2014. 7. 23.에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10점)
- (2) 백지로 된 매매계약서에 작성명의인 乙이 서명날인한 후 제3자인 丙이 매매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甲이 이 문서를 제출하여 승소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10점)

【 문제-3 】 (30점)

甲은 乙을 상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7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5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 (1) 甲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이미 주장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으로 하고, 여기에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병합형태가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15점)

- (2)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청구 외에 별도로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甲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乙이 제1심 판결 선고 후 행한 새로운 명예훼손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새로운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경우 甲을 위한 구제방법을 설명하시오. (15점)

【 문제-4 】 (20점)

甲 회사는 乙 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기하여 2010.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 (1) 甲 회사는 항소심에서 위 청구를 철회하고 구 「상표법」 제67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그 후 甲 회사는 다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기하여 2010. 1. 1.부터 2014. 3. 3.까지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甲의 청구의 추가가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 (2) 甲 회사의 대표자 丙이 乙 회사와 공모하여 개인적으로 돈을 받기로 하고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丙은 항소를 취하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경우 丙이 한 항소취하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